

데스크 시각

앞새주 한 잔의 애향심



최재호 경제부장

미국과 중국 등의 경제적 압박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치달으면서 올해 우리 경제에도 온통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성장률 등 올해 예상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최악의 수치들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물론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부르짖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강력한 자국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각국으로부터 반발과 경계를 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 크게 반감을 갖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국 보호무역주의와는 그 궤를 달리하지만 필자는 우리 지역 기업들의 제품 시장점유율에 트럼프식 논리를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배경은 우리 지역 기업들의 지역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젊은 층에서는 그 제품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 크게 반감을 갖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은편칼럼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춥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칠퐀이 대통령'과 그 일당들에 대한 준엄한 응징, 민주정부의 수립과 한국 사회의 대대적 개혁, 그리고 이런 변화를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이끌 새로운 헌법의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개헌을 지지한다. 시기와 권력구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하던 대선 후에 하는 개헌 논의는 활발해야 한다. 대선 후에 개헌을 하더라도 대선 후보들의 개헌공약이 기자회견이나 토론장에서의 일방적 선언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밑으로부터 개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국회 개헌 특위가 가능한 한 대선 전에 개헌안을 만들어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개헌을 요구하는

기 고



류진항 충청산업(주) 대표이사

건설현장의 필수자재가 되고 있는 레미콘의 산업기반이 중대위기를 맞고 있다. 수요자의 절대 권력이 부추기는 부당한 출혈 경쟁과 공장난립으로 거레가격이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70% 이상의 공장 주인이 바뀌는 지경이 됐다. 공장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레미콘은 단순 산업으로서 재고 없는 상품이라는 특성과 주된 상품이냐는 용이성이 결합된 계절산업이다. 고가의 장치산업이라는 취약성도 있다. 그럼에도,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1000여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110여개 공장이 난립해 전국 최저치인 21%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데는 이권이 없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지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소주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가 있다. 광주·전남에도 100년 기업을 추구하는 보해양조(주)가 67번째 지역소주 시장을 지켜 오고 있다. 하지만 앞새주로 대표되는 지역의 보해 시장점유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 충남 충북 경남 등 다른 지역 소주의 시장 점유율은 신장됐는데 비해 보해의 경우 64.8%에서 63.1%로 감소했다.

지역 소주를 아시나요

이 같은 현상은 광주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은 진로(鎭) 70%, 경북 금북주가 78%, 경상남도 무학이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광주·전남의 보해 앞새주는 68%에 머물렀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 소주업체인 보배가 하이트진로에 인수되면서 하이트진로가 7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배와 기타가 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해보로서는 호남권의 큰 시장인 전북을 하이트진로에 뺏겨 버린 셈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강제로 돌려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전국 각 지역마다 지역 소주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보해가 2011년~2013년 사이 저축은행 여파로 인해 지역 여론이 악화되

면서 지역민들의 애정을 잃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임지선 대표가 부임하면서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밀착 경영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는 중이다.

지역 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세 납부,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이 대표적 효과다. 그렇다고 무작정 애향심에 의존한 마케팅과 품질이 미치지 못하는 데도 지역 제품을 써주자는 것이 아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지역 기업들이 전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소주 시장은 정부가 지난 1973년 지방소주 업체를 육성한다며 1도(鎭) 1사(社)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 때문에 1970년까지만 해도 200여 개였던 소주 업체는 통폐합을 통해 10년 뒤 10여 개로 대폭 줄었다. 1976년에는 주류 도매상들이 사들이는 소주의 50% 이상을 자기 지역 소주 회사에서 사도록 하는 자도주(自道酒)의 무 구입 제도도 마련됐다. 이 자도주 보호 규정은 1996년 헌법재판소의 자유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해당 지역 소주 제조업체의 지역 정서 호소 활동 등으로 각 지역에서 생산된 소주가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후 서울·경기의 대표 소주회사인 하이트진로가 25인 소주 시장에 23도의 점유율을 출시하면서 전국 시장 점유율 50% 라는 안정적 기반을 갖고 지방을 공략하고 있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점유율이 밀려 보

해 앞새주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호타이어도 한 번쯤

광주와 곡성에 공장을 둔 금호타이어도 사정은 마찬가지. 2014년에만 해도 호남권 점유율 40%대로 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30%)보다 10%포인트 가량 지역에서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한국타이어가 40%대로 약진한 반면 금호타이어는 정체된 상태다. 광주 지역은 그나마 금호타이어가 한국타이어보다 4~5%가량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이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격차로 한국타이어를 따돌렸지만 위크아웃 이후 한국타이어에 시장을 내주고 나서는 좀처럼 지역 내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에게 지역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다소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60년 이상 지역을 지켜 온 소중한 기업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채용이 줄고, 공장 가동 등이 어려워진다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보해 앞새주와 금호타이어는 그 제품의 면면이 여타의 제품들과 경쟁력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식당에서 소주를 시킬 때 보해 앞새주를 떠올리고, 타이어를 교체할 때 금호타이어를 한 번쯤 고려해 본다면 이 또한 지역경제를 위한 작은 애향심 아닐까. / lion@kwangju.co.kr

개헌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진실

국민 및 국회의와 의 약속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약에 구속력이 따른다.

개헌의 내용에서 기본권 및 직접민주주의 요소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문제는 권력구조이다. 현재 선진 민주국가들의 권력구조를 살펴볼 때 순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그나마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권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다. 3권 분립도 잘 되어 있다.

히틀러에 맞서 싸운 영국의 처칠, 1990년 독일 통일을 이룬 서독의 헬무트 콜 등 두 내각제와 연립내각의 수상들이었다. 내각제는 비효율적이고 연립내각은 나눠먹기 제도라는 주장에는 오해가 많다. 혹자는 일본의 예를 들며 내각제를 반대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법도 피를 흘려본 적이 없다. 일본을 우리와 비교한다면 맞으면 좋겠다.

1950년대 후반 프랑스 국민들은 일제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리스마가 강한 드골을 정계 복귀시키면서 그 요구대로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바꾸어주었지만 대통령에게는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는 내정을 맡기는 식으로 권

력을 분산시켜버렸다. 순수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 중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가장 절절하게 느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순수 대통령제를 가장 완강하게 고수하려 한다. 그들은 왜 미국식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것일까? 대통령제야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보건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처럼 민주주의와 국회를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대통령의 권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정권은 보수와 개혁진영이 번갈아 맡게 되어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시 지금과 같은 대통령 권력을 박근혜 같은 사람에게 넘겨주어도 되는 것인가? 꼭 짚고 싶지 않은가?

혹자는 개헌론의 불순함을 지적한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지지 정치인들에게서도 이혜타산은 발견된다. 그러니 개헌 문제를 순수성 여부로 논하지 말자. 나는 솔직히 민주당이 현실

적으로 존재하는 개헌론자들을 외면하여 대선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다. 개헌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민주진영 사이의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방분권형 개헌도 가능하다. 나는 민주세력들이 공동의 개헌안을 만들고, 공동으로 대선에 임하고, 집권 후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집권 초 개헌을 단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민주진영의 큰 집인 민주당은 개헌과 권력구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야권과 민주세력의 단합을 이끌어나라. 동시에 여론세력들에게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문제에 대해 비탈을 제안하라.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정치는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정치력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제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지지하고 또 성공하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대선 주자들 경제·외교·안보 비전 제시해야

박한철(64)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는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도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은 2달3초(2월말~3월초)에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사실상 4달5초(4월말~5월초)에 ‘빛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의 전망대로라면 차기 대선까지는 100일 정도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를 검증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상은 엄중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가운데 내수는 얼어붙었고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다. 여기에 청년 실업 등 고용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가계 부채는 시한 폭탄인 상황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카드를 만

지작거리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화의 여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북한이 불량난을 저지르면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에 나설 것이고 사드 한반도 배치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압박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안보·외교 분야에 삼각파도가 몰아치는 형국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대권 잠룡들은 제대로 된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 민심에 기대거나 제3지대, 박·텐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를 검증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진영 논리를 넘어 경제·안보·외교 분야 등의 시대적 비전 제시로 국민 통합의 에너지로 극대화할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의 치열한 정책 경쟁과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동·여성·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시급하다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7곳이 노년 시설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이나 아동, 여성, 장애인 등과 관련된 시설은 극히 적어 시설별 및 지역별 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복지재단이 지난 30일 발간한 ‘전남 복지 자원 총량조사 및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 482개 생활시설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과 양로 시설 등 노인 관련 시설이 전체 64.9%가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자활시설, 아동 보호 치료시설, 아동 자립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각각 1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 지역 인구 특성상 노인 관련 시설만 집중적으로 설립한 결과다. 게다가 시·군별로는 목포·순천·여수시 등 시 단위에 비해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 자원을 지역에 배분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노인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생활시설은 주거환경 개선이 대체로 미흡하고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시설은 주거 개선 지원이 전무하다고 하니 관련 지원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급증으로 복지자원이 노인시설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장기 계획 수립으로 정신질환자나 노숙인·아동·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 자원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주 금성관 앞에 있는 ‘하얀집’은 나주공탕의 원조다. 서울의 이문설렁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인정한 100년 넘은, 우리나라에서 단 두 곳밖에 없는 음식점이다. 1910년 원관례 할머니가 나주관에 앞 장터에 자리를 잡으려 공탕을 팔기 시작해 4대째 내려오고 있다. 나주공탕이란 말도 하얀집이 처음 사용했다. 나주는 곡창지대라 소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소고기를 이용해 공탕을 만들어 팔았는데 음식 이름을 고민하다가 지명을 따

‘해남 천일관’이란 이름으로 1992년 개업한 뒤 지금은 손녀가 맡아 외국인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

‘삼대광양불고기집’은 1930년 개업 이래 말 그대로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1대 이소은 할머니가 일용식당을 열어 광양불고기를 처음 선보였을 때만 해도 석쇠에 굽지 않았다. 2대인 이영조 씨가 노화로에다 구리 석쇠를 올려 양념을 다진 불고기를 구우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 국내 3대 불고기였다.

100년 맛집

한정식으로 유명한 해남 천일식당은 1924년 박성순 할머니가 해남읍 장터에서 국밥집으로 시작했다. 점차 딱딱비와 돼지숯불구이·홍어·김치 등 15가지 밑반찬과 10가지 기본요리를 더해 남도 한정식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성장했다.

전남도가 맛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강화를 위해 30년 이상 된 맛집을 선정해 관광자원

화하기로 했다. 향토음식점이 가진 역사와 음식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해 전남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가업을 잇는 것이 전통이 된 일보에선 100년이 넘는 음식점이 무려 1만 5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음식점의 평균 생존기간은 3.1년으로 자영업 가운데 수명이 가장 짧다. 음식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00년 맛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위기의 레미콘 산업, 공정한 분배가 대안이다

이처럼 레미콘 업계는 산업 고도화 정책에 따른 일시적 호황이 부른 유망 업종이라 불리면서 대책 없이 공장들만 늘어나 산업 전반이 동반 침체하고 있다. 더불어 건설현장 대형화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일시에 대량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원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조건과 공장의 대형화가 경쟁력이 되는 불가피한 현실까지 겹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다출혈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레미콘 산업 자체의 붕괴나 몰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의 전조로 봐야 한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19세기 말 반부역차가 심화되는 산업화 시기를 맞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배분 문제에 있어서 무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루즈벨트는 이른바 ‘공정한 대우’(Square Deal)라는 신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그의 취임사에는 독점규제, 중소기업 보호, 사회적 약자의 권리신장 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에 처한 중

소기업 경영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대우와 분배를 외쳤던 그의 정책은 크게 공감을 얻었다. 그의 ‘공정한 대우’는 기업 활동과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었다. 정부가 경제활동 자유와 효율성 못지않게 분배의 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는 미국 자본주의의 진보적 이상을 대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곧 미국식 수정 자본주의의 이념적 토대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남겼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초기에 사회·행정·경제적 감자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위원회’ 등 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 그리고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갑질의 횡포를 근절코자하는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실망과 아쉬움만 남겼다. 우리 레미콘 산업이 영세화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수요의 건전성과 공정한 분배 시스템의 결여 때문이

다.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경제적 감자 앞에서 시장경제 논리는 부조화를 개선할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제 정부기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레미콘 산업의 공정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웃 일본과 독일처럼 레미콘조합이 공동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레미콘 판매 원가에서 불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에서 발표한 ‘레미콘 산업의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판매로 얻어지는 근거리 조정 판매로 레미콘 운반트럭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 유통 가격 대비 7%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산업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미콘 시장의 불합리한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한편 정부기관의 개입, 그리고 공정한 분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같은 방안은 위기에 처한 레미콘 산업의 대안이 될 것이다. 레미콘 업계도 투철한 사회적 사명감을 갖고 품질로 보답하겠다는 건전한 기업이 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편물 발송 10,000원 1부 500원	
사 지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